

성심당보다 경쟁력 없는 한계·부실기업... “지금 정리해야”

코스피 5000시대

③ 저수익의 상장사들

연 매출 2000억원을 앞둔 빵집이 등장했지만, 국내 증시에는 그보다 수익성이 낮은 상장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오천파’(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증시 호황에도 한계기업 퇴출 지연으로 인한 자본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창업 70주년을 맞이한 ‘성심당’은 국내 단일 빵집 중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대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성심당의 2024년 매출은 1937억 5900만원으로 2023년 1243억 1500만원 대비 55.86% 증가했으며, 2020년 488억원보다 다섯 배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2023년 대비 51.79% 증가한 478억 1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성심당의 인기는 지속됐다. 대전에는 성심당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을 즐기는 ‘빵 택시’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시장에서는 성심당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025년 매출이 2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빵집보다 못 버는 상장사

그렇다면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상장사들이 모여 있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어떨까.

상당수의 국내 상장사들은 성심당보다 낮은 수익성에 머물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309곳(코스피 221곳·코스닥 88곳) 중 영업이익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83곳으로 전체의 26.86%를 차지한



‘빵집보다 못 버는 상장사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국내 증시 내 한계기업’ 관련 이미지.

성심당, 지난해 매출 2000억 전망 달성 시 국내 단일 빵집 중 최초

영업이익 500억 미만 기업 26.86%

2017년 이후로 한계기업 증가세

퇴출 고위험 기업, 실제 퇴출 적고 정상기업으로 대체 안돼… 투자 ↓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상장사도 코스피는 34.39%(76곳), 코스닥은 29.54%(26곳)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 중인 한국 증시 이면에는 다수의 한계기업들이 존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의 규모는 지난 2024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에는 17.1%까지 높아졌다. 분석이다. 한국 기업의 생태계는 2016년을 전후로 위축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를 판단하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3년 연속 1배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구조조정은 더디다. 한국은행의 ‘경제 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퇴출 고위험 기업은 2014~2019년 약 4%였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2%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이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 비중은 0.4%로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퇴출 고위험 기업이 제대로 정리되고 정상 기업이 그 자리를 차웠다면 국내 투자는 2014~2019년 3.3%, 2022~2024년에는 2.8%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 생산(GDP)는 각 기간에 0.5%, 0.4%씩 늘었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난해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난해 명목 GDP가 2556조 8574억원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조 2274억원에서 최대 12조 7843억원이 증가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퇴출 고위험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보다 투자를 현저히 적게 하기 때문에 풀이됐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나 퇴출이 원활했다면 상당한 투자 증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투자 증대는 직접 효과를 넘어 2차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한은은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증가가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 구조조정은 정상화 첫걸음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좀비기업(한계기업), 부실기업들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에 대한 시장 내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도 영향 미미
경기부양책 전 기업 정리 선행돼야
무차별 지원 땐 시장 역동성 저하
기업 진입·퇴출로 경제 뒷받침해야
주력산업 규제완화·신산업 투자 촉진

전문가들은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더라도 성장을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경쟁력 있는 기업들까지 필요한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전반적인 시장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문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5년간 신규 상장 수 증가율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3배 수준이지만, 신규 진입 대비 퇴출은 미미하다”며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률을 보인 지난해에도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이었다”고 짚었다. 시장 호황에도 비효율 기업이 정리되지 못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도 “장기 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에 기대 연명하면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과 한계기업 퇴출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정체와 대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이견’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신속대응 필요
금융위, 인지수사권 부여 신중해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도 영향 줄 듯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범위와 역할을 두고 금융당국 간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개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인지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조사에 국한한 기준을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 감리, 민생 금융 범죄 등의 인지수사권으로 확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 금감원 ‘절름발이 특사경 납득 못해’
현재 특사경의 수사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제한돼 있다. 2019년에는 금융 사건을 전담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특사경 운영을 주도했고, 인력

구성도 금융위원장이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2022년 자본시장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 조직을 별도로 두고 인력을 확충하는 개편이 진행됐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남부지검 소속 인력을 포함해 총 31명 규모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인지수사권 확대를 통해 민생 금융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위 이첩과 내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의 감독 규정으로 임의적으로 인지수사를 제한했다”며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를 납득 못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금융위의) 프로세스를 거치면 대략 11주가 날아간다”며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금융위, 인지수사권 부여 신중

반면 금융위는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중대범죄인 불공정거래 수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공권력 남용 우려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독·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인지수사권이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 특사경에만 부여된 것은 공적인 수사업무의 특수성과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수사권이 부여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일본 금융청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해당논의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공식화했으나 이후 조직개편안을 철회하면서 이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30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매출 전체적 감소, 영업익은 개선
올해는 소형모듈원전 기대감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건설사 매출이 역성장 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원가율 안정과 함께 선별 수주 등 내실 다지기로 수익성은 개선됐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 DL이앤씨를 비롯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작년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건설사 전체적으로 매출은 일제히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건설사별로 온도차가 있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작년 매출 추정치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30조 7057억원이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4년 1조 2634억원 적자에서 2025년 638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7조 7028억원, 영업이익은 흑자인 1047억원으로 예상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연말 기준 2025년 매출액 전망치를 기준 30조 3873억원에서 31조원으로, 신규 수주 규모를 31조 1412

억원에서 33조 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흑자전환은 기정 사실이지만 흑자폭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출과 수주는 늘었지만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초 1조 1828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현대건설은 “일부 플랜트 현장의 공기 지연에 따른 원가를 반영했고, 연결 종속회사의 본드콜에 따른 변동요인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주가는 작년 초 2만 5450원에 서 전일 기준 10만 9200원으로 1년 만에 무려 4배 넘게 급등했다. 올해도 외형성장은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40조 414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의 주원인은 건설부문이다. BNK 투자증권은 작년 건설부문 매출이 13조 3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봤다.

올해 전망은 밝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경쟁력을 입증한데다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신성장동력도 확보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